

“경찰 맞다니까요?” “백골단 아닙니다” 형사기동대 이름 ‘촌극’

강력사건 핵심 수사부서지만 ‘집회관리’ 기동대와 혼동 소지 “형사 맞냐” “기동대가 왜 수사하냐” “보이스피싱이냐” 의심 백골단 공식명칭 부활 ‘반감’...내부서도 “헛갈려” “굳이 왜”

광주경찰청은 20일 청사 내 강당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열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신뢰하는 경찰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범죄 대응 강화 차원에서 확대 개편한 각 지방경찰청 산하 형사기동대가 창설 두 달을 맞지만, 제 기능을 명확히 담지 못한 명칭 탓에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 조직개편안 시행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형사기동대’로 확대 재편됐다. 대장 직급은 경정에서 총경으로 격상됐고, 인력도 기존보다 1.5배가량 늘어난 ‘메머드’급 수사부서다.

형사기동대는 조직·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악성 사기와 같은 민생 침해 범죄를 전담한다. 예방 순찰과 첩보 수집 활동으로 인정한 범죄는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부서다.

청 관할 지역은 물론이고,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이른바 ‘전국구 강력 범죄’도 수사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광역 단위 형사 사건 수사부서로서는 ▲형사기동대(1986년) ▲기동수사대(1999년) ▲광역수사대(2004년·유영철 연쇄 살인) ▲강력범죄수사대(2021년·검경 수사권 조정)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경찰을 다룬 영화·드라마 매체를 통해 이른바 ‘광수대’(광역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친숙하다.

그러나 이번 확대 재편으로 38년 만에 다시 형사기동대로 명칭이 바뀌면서 크고 작은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집회 질서 유지나 음주 단속·순찰을 지원하는 ‘다목적 기동대’와 혼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때문에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탐문, 출석 통보, CCTV 영상 조회 요청 등 수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기동대원이 왜 사복 입고 근무하느냐”, “기동대가 무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느냐” 등 시큰둥하거나 의심하는 반응이 잦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전화로 피의자 수

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신중 보이스피싱 또는 경찰 사칭 의심까지 사는 촌극도 빚어진다.

형사기동대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소속 부서와 직급 등을 밝혀야 한다”, “예전 광수대대라고 설명하면 겨우 믿는다”, “피싱 의심 받을 때면 회의감마저 든다”라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는 1980~90년대 재야·학생운동 시위 진압에 투입됐던 이른바 ‘백골단’(옛 공식명칭 형사기동대)으로 착각해 적개심부터 드러내는 시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관은 “과거 시위 현장에서 강경 진압 악명을 떨쳤던 ‘백골단’의 공식명칭이 부활하면서 반감부터 드러나기도 한다. 이해 부족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해명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다”라고 전했다.

시민 불신에 더해 경찰 내 조소와 비아냥까지 일면서 형사기동대 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은 “내부에서도 ‘고유 업무·기능’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굳이 각 기능마다 ‘기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비꼬았다.

현재 형사기동대(형사) 외에도 함께 신설된 ‘기동순찰대’(범죄예방 대응)와 기존 ‘기동대’(경비)가 서로 명칭부터 헛갈린다는 지적이다. 내부에서도 각 조직의 정확한 역할·업무 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실제 이번 개편 전 내부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광역수사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뜻이 분명한 ‘광역형사대’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유력 검토되기도 했다.

형사기동대에 근무 중인 형사는 “경찰은 시민과 늘 만나고 호흡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본래 기능 변화가 없다면, 직제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부서) 이름이어야 협조도 원활하다”며 “내부에서도 헛갈리는 데다가, 어두운 역사까지 있는 ‘형사기동대’를 굳이 고집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독서와 함께 보내는 주말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조성된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입료 비공개...위법”

법무부 상대로 수입료·재판경비 공개 요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입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던 2022년 6월 국회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각하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내역, 변호인과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무부는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 경비와 법무법인 정보 등은 법

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관련 공무원 명단의 경우 요청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법무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입료는 정부 예산에 해당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 수입료가 공개되더라도 소송 취지를 감안하면 특정 로펌의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보고 변호사 수입료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수입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재판의 갖는 공익적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달리해

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번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기관 상호간 권한쟁의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이라며 “어느 사건보다도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며,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는 이를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입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재정작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며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용을 지출하며 국민을 납득시키기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익 달성에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수임시 자신의 활동이 국가 재정 지출대상이자 공적 관심에 속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공조달 방식으로 이미 수입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피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로펌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영일기자

의대당국 “2025년도 입학정원 동결...의료계와 협의체서 논의하라”

전국 40개 의대 협의체, 21일 대정부 호소문 발표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 맞추기 어려워” 토로 “현사태 지속 시 학생 불이익 최소화 위해 휴학 승인” “의료 인력 배출 규모, 총장 자율적 결정 비합리적”

의대 협의체가 의대 증원 사태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협의체인 한국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원)장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며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이달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토론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AMC는 “정부는 4월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가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평택 아파트 공사장서 부품 맞은 50대 사망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부품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께 로케비양건설이 시공하는 평택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노동자는 연약한 지반의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 말뚝을 지반에 삽입하는 건설 장비인 ‘항타기’ 작업 중 파손된 부품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